

## ‘軍 복무’ 대한민국 남자들의 암흑기?

# 합리적 처우, 급여 현실화 등 ‘인권개선’으로 인식 바뀌어야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下〉 군대의 조건

#1. 윤승주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선임 4명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 그해 4월 7일 숨을 거뒀다. 전날도 계속된 폭력에 오줌 흘린 채 정신을 잃은 윤 일병은 “피병 부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가슴을 걷어차였다. 주범 이모 병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윤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균경)로 의결했다가, 지난 1월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2.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대장 부부의 공관병이 노예생활을 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과 조리병, 보좌관 등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에서 조리과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부당한 잡무를 맡았다는 제보였다. 박 전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폭언은 물론 썩은 과일을 집어던지고, 일을 못한다며 배란대에 40분간 가뒀으며, 남편의 육군참모차장 재임 시절 공관병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하는 등 노예로 부렸다던 증언이 쏟아졌다. 이에 수사에 나선던 군 검찰이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해, 현재 수원지검이 전면 재수사중이다.

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  
영창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 약속  
의무시설 개선·군의관 보강으로  
‘군병원=불신’ 과제 해소해야

현역병의 억울한 죽음 방지와 급여 현실화, 억압적이지 않은 병영환경 등이 ‘믿고 갈 수 있는 군대’의 조건으로 거론된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13만334건의 인권침해 상담 중 4158건이 군 관련 내용이었다. 2013년 337건에서 이듬해 502건으로 늘어난 상담은 2015년 3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03건으로 다시 늘었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생명권 침해’가 240건이었다.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은 748건에 달했다.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역시 614건으로 적지 않았다. 다만 생명권 침해는 2013년 2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줄었다. 폭행의 경우 36건에서 25건으로 줄었지만 폭언은 55건에서 99건으로 꺾중 뛰었다.

이 때문에 군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침해조사국에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했다. 군인권조사과장은 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군 교도소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국방부 ‘투명성 강화’ 약속

국방부도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에 앞서, 정부가 현역병에 대한 인권 보호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투이미지

표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 개혁을 약속했다. 재판 없는 처벌인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항소심 군사법원도 없애 서울고법에 사건을 이관한다. 최종 재판 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없애기로 했다. 인권보호관 신설과 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각 부대 검찰부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병사들 사이에 만연한 군병원 불신도 과제다. 2016년 8월 청평 국군병원 소속 A 군의관은 목디스크 환자인 김모 병장에게 수술용 조영제 대신 소독용 에탄올을 투여해 왼쪽 신경을 마비시켰다. 이를 두고 대학병원 수련의를 거쳐 투입된 단기 군의관, 이를 보조하는 의무병이 응급상황 대처는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는 향후 민간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된 의무시설 개선과 군의관·응급구조사 보강,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 배치 등을 약속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병사 봉급 문제는 차츰 해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장 월급을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잡질’로 통하는 제조작업과 병사 생활 공간 이외 구역 청소를 민간에 맡기고,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허용도 추진한다. 2019년 전방 GOP 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 2021년 전군 후방과 지원부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믿고 가는 군대 조건은 ‘인권개선’

하지만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등 과오가 부각돼, 당분간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

이다. 당장 현역병이 직업군인에게 느끼는 박탈감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군필자인 임기혁(26)씨는 “선택지 없이 끌려가 24시간 복무체계 속에 사는데도 편의점보다 월급이 적다”며 “부사관과 장교들에게 병사처럼 추가 근무하면서 초과수당 받지 말라고 하면 사직서 낸다고 난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직업군인 상당수가 카카오키퀴 임 상위에 올라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사들의 불만이 가득한데 전투력이 유지되겠느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믿고 갈 수 있는 군대의 조건은 합리적인 처우를 통한 인권 개선으로 귀결된다. 부대 내 사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병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 방해림 상담지원 간사는 “(군대 내) 사건 발생 시 즉각 신고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아 문제”라며 “군인복무기본법과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병영 악습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병사들에게 일정부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방 간사는 “일부 시범 운용 중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해당 부대장들이 좋아하고 있다”며 “병영 악습도 없어졌고 병영 부조리도 많이 줄고 병사 반응도 좋다”고 밝혔다. 병사들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해져 부대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병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직원 폭행’ 양진호 회장 체포

영장에 마약 투약 혐의 포함

경찰이 회사 직원 폭행과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양 회장 체포에 나섰다. /이병종 기자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 전직 직원을 불러 폭행하는 장면, 위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웹하드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영상 속 무기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의장형 하드디스크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을 수사해왔다. /이병종 기자

## 국토부,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전면개편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 도입  
기획 제안 온라인 접수창구 신설

앞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R&D 과제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 과제로 채택되기까지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과제의 접수와 협의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평가 시 실적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한다.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점검회의는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한다.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설하고,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형석 정책기획관은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두어 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40년만에 없앤다

국토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업역규제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건설업계가 40년 묵은 종합-전문업체간 칸막이를 허문다. 업역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 오는 2021년이면 공공공사에서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필요 자본금

준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북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 업계·노동계와 논의한 끝에 세부 사항을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선언으로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